

최중경 “표준감사시간제, 증시 시총 16兆 높일 수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투명성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가 상승효과로 감사비 증가 상쇄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공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오는 11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회계감사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회계 투명성 제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낮아 기업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다”면서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이 1600조 원임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1%만 높아져도 1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들의 낮은 회계 신뢰도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피(fee)보증을 두 배로 내야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알게 모르게 기업들의 비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준감

사시간제 도입이 기업의 회계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한 최 회장의 답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비용이 약 3000억원인데 감사보수가 100% 늘어나도 3000억원이 넘는 것

이라면서 주가 상승효과가 감사비 증가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공회는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한공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달 초까지 의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 15일까지 기업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다.

최 회장은 “최종안이 기업,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받아들여지도록 할 것”이라며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기준 아래서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가 최소안에서 ‘최소시간’의 개념이 빠지면서 처음보다 맥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도의 미비점을 장인의 우수성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회장은 “제도를 아무리 엄격하게 짜 놓아도 플레이어들이 합의할 못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합의만 이뤄지면 최소시간, 평균 등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감사인등록제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 회계법인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한해 주권상장법

의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의 대형화 바람이 불 것”이라면서 “신 외감법이 감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 만큼 그 리스크를 감당하려면 회계법인의 규모도 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감사인지정제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외감법 개정을 통해 기존 자율수입제에서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는 감사인지정제로 제도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의 감사인 독립성 문제로 감사인 지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은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문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나온 화두지만 회계 개혁이 대단히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검사가 이래도 되나... 먹살잡고 으박지르고 웃기까지

대한변협 검사평가 사례집

강압조사·요구 목살·인권침해 등 다양
우수검사 수원·하위검사 서울에 몰려

A 검사는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데 대해 수사기밀 유출행위로 몰았다. 피조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동하지 말라고 협박한 그는 조사 중 피조사자의 먹살을 붙잡았다. 변호인이 잠시 떨어져 있을 때는 귓속말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펜으로 피조사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대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사중 반말에 고성, 조사 수정 요구 목살, 같은 질문 반복, 답변을 자르는 일방 질문, 인격 모욕,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피조사자 소환 후 대기실에 최장 9시간을 대기시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상당수 검사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강압조사를 일삼는 등 상식밖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31일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내고 회원 2192명이 작성한 5986건의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회원들이 수행한 사건을 맡은 전국 검사다. 변협은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수사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5명(공판 5·수사 10)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2019년 인사 평가 반영을 요청했다.

◆지적장애 피해자 안 만나는 검사

사례집에 담긴 수사 검사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했다. 지적장애 3급인 서모 씨는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수급자 기본 재산 한도는 그가

사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3400만원으로, 서씨가 별 다른 재산 없이 15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줄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변호인에 따르면, 2013년 피해자 서씨와 피의자 간에 작성된 대여금 채권 1500만원이 서씨를 강요한 결과임에도 검사는 강요 부분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요청에도 고소 진행 중 서씨와 검사 간 대면 대화도 없었다.

2차 피해 방지 노력도 없어, 피의자가 서씨 아버지에게 ‘내가 구속되면 불법 입양시설이 알려져 아들을 국가에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의자와 서씨 아버지는 이후 서씨를 24시간 미행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30일경 편의점 앞에 있는 서씨에게 다가가 고소 취하와 함께, 자신이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서씨는 이들의 말을 따랐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검사의 판단과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지할 지능 자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인력 부족과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서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씨가 고소 대리인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와 아버지의 강요로 적은 고소취하서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불기소했다.

서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의자 측을 가장 많이 심문하고 진술을 들으며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소 의견을 검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묵살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은 검사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님에도 지적장애인 행세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진 채, 피해자

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진술 중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우를 범했다”고 탄식했다.

◆인생 건 최후진술 앞에서 웃어

공판 검사들의 인권침해도 만만치 않았다. B 검사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아동을 반말과 짜증, 화가 섞인 어조로 신문했다. 으박지르기식 질문에 창피하고 겁이 난 아동은 끝내 눈물을 흘려 재판이 중단됐다. B 검사의 태도는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인생을 건 최후 변론을 가버어 여기는 행태도 지적됐다. C 검사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도중, 다음 사건을 위해 법정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손 흔들며 웃었다. 해당 검사를 평가한 변호사는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웃는 것 부터가 엄정한 소추를 기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해가 될 뿐 아니라,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해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인데, 불과 1분 전에 스스로 징역형을 구형한 대상인 피고인 앞에서 웃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후 변론을 마친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라면 자신이 배운 법정 예절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가르침이 나 지도는 없는 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였다.

앞서 변협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검사는 수원지검에,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검사는 수원지검 4명, 광주·대전(지청 포함) 각 3명, 서울중앙·동부·의정부·인천 각 2명, 창원(마산지청)·부산 각 1명이다.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동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각 2명, 서울남부·대구고등·인천·대전·창원(진주지청) 각 1명 순이었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한다. 하위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검사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범종 기자



교정시설 가족사랑캠프.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법무부는 설을 맞아 수용자 가족 만남 행사와 합동 차례를 이어간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월 15일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마련했다.

교정시설 구내 별도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도 진행 중이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11개 기관 수용자 369명, 수용자 가족 908명이 참여한다. 가족 만남의 집은 20개 기관 수용자 74명, 수용자 가족 200명이 참여한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점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경제적 어려움·이혼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아동친화적 접점실을 마련하고 관계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연휴 기간 영화 상영도 이어진다. 교화방송센터는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어 원’ ‘코코’ ‘궁합’ 등 영화 5편을 교화방송 TV로 방영할 예정이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낸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기관별 교정위원과 지역 종교단체 지원으로 떡국과 과일 등을 전 수용자에게 제공한다. 고령자 위로행사, 웃놀이, 제기차기 행사도 마련한다. 합동차례는 52개 기관 수용자 1784명이 참여한다. 교화공연과 민속놀이에는 9개 기관 수용자 701명 참여한다.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 가석방 안돼”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의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 유포로 광범위한 정신적 피

해가 발생한 경우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해가 발생한 경우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